

##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실태 및 방안

채경희  
총신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 The Adaptation Status of North Korean Defectors to South Korean Society and Its Effect on their Problem Solving Ability

Kyung-Hee Chae

Dept. of Christian Edu, Chonshin university

**요약** 북한주민들의 탈북은 과거와는 달리 단순한 탈출이 아닌,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이주의 성격을 가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실태와 그에 따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적응실태, 그리고 사회적응의 어려움에 대한 요인을 문헌 고찰 및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은 2000년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다가, 2012년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입국자수가 감소하였다. 또한 1999년 이후의 북한이탈주민은 그 이전의 입국자들보다 학력, 직업, 계층면에서 수준이 떨어지는 편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부적응 요인은 경제활동의 어려움, 남북의 정치체제의 차이, 남북의 다른 경제제도, 남북의 서로 상충되는 문화, 가족관계로부터 오는 어려움을 들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부적응 문제는 북한이탈주민의 노력과 남한 사회의 제반 시설이 뒷받침해 줄 때,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사회구성원들과의 어울림과 정서적인 공유가 중요하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을 위하여 국가적으로 사회 안정망 구축 및 재정 부담을 감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Abstract** Unlike in the past, North Korean defectors are not merely satisfied at escaping the regime; they now consider their escape as a form of immigration to pursue a better life. This study examines the adaptation status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suggests a plan to cope with the associated challenges accordingly. The current status of North Korean defectors is analyzed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and the latest data on their current status, along with their actual adaptation progress to South Korean society and other factors related to the difficulty in their social adjustment.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has increased rapidly since 2000, but the number started to fall in the wake of the inauguration in 2012 of the Kim Jong Eun regime. In addition, North Korean defectors arriving after 1999 are significantly less educated and from lower levels in terms of their occupation and livelihood than those who arrived before. The factors related to North Korean defectors' maladjustment to South Korean society include: difficulties in performing economic activities, differences in the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and cultures, of the two Koreas, and other difficulties stemming from family relations. If the difficulties North Korean defectors experience in adapting to South Korean society are resolved with the support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facilities of South Korean society, North Korean defectors will be able to settle down successfully. It is also important for North Korean defectors to strive to adapt to South Korean society by sharing their emotion with the members of society. Therefore, in order for North Korean defectors to adapt smoothly to South Korean society, it is necessary to plan some concrete ways that would reduce social and financial burdens nationwide.

**Keywords** : North Korean defectors, Social maladjustment problem, Adaptation to South Korean society, Social settlement, Measure

\*Corresponding Author : Kyung-Hee Chae(ChonShin Univ.)

Tel: +82-2-3479-0534 email: khchae@chongshin.ac.kr

Received September 1, 2017

Revised (1st September 14, 2017, 2nd September 21, 2017)

Accepted October 13, 2017

Published October 31, 2017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냉전시기에 북한주민의 탈북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타나는 특별한 상황이었다. 귀순용사로 환영받고 ‘영웅’ 대접과 적지 않은 ‘보상금’을 받던 그들이 남한에서는 정치적으로 특별한 존재로, 북한에서는 조국을 배신한 ‘반역자’가 되었다. 그러나 김일성 사후 1995년부터의 ‘고난의 행군’ 이후에는 북을 이탈하는 사람들의 성격이 바뀌게 되었다. 기아에 허덕이던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나 주변의 아사를 경험하면서 탈북을 결심하게 되고, 이러한 탈북은 더 이상 ‘조국을 배반’하는 사안이 아닌 배고픔에서 오는 경제적인 이유로 줄을 이어 이루어진다.

북한 내에서 탈북은 더 이상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정치적인 것이 될 수 없었다. 평범한 보통사람들이 두만강·압록강을 건너게 되었고, 북한의 일반주민들은 더 이상 탈북자를 북한당국이 얘기하는 ‘반역자’로 간주하지 않게 되었다.

1990년대 후반 북한당국 역시 이러한 ‘반역’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없을 정도로 탈북자의 행렬은 늘어만 갔고 탈북자들을 처벌하는 곳에는 복송된 사람들로 넘쳐나고, 당연히 당국의 처벌이 약해지는 때도 많았다. 두만강·압록강 유역의 인민군 경비대군인에게 일정금액만 쥐어주면 탈북을 눈감아주거나 지어는 탈북경로를 안내해주기에 이르렀고, 이는 탈북의 일반화를 가속화시켰다. 또한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대남적대의식이 희석된 것도 탈북의 일반화에 동조하였다.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탈북은 누구나 결심하면 가능한 일로 여겨졌고, 그 구체적인 방법과 루트는 복송되었거나 중국을 다녀온 사람들에게 의해 급속히 전파되었다. 물론 함북을 비롯한 국경을 낀 지역에서는 더더욱 쉬운 일이었다. 그러나 내륙지역의 북한주민에게도 그 소식은 전해져 적지 않은 주민들이 이탈하는 현상을 가져왔다. 2002년 이후에는 단순히 식량난만이 아닌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이주의 성격도 강해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과반수는 가족초청에 의한 기획탈북이다. 한편 재외 탈북자의 70% 이상을 여성이 차지할 정도로 이주의 여성화가 두드러지게 되고 이런 성별 분포는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1].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는 주로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인식과 적응실태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그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실태와 그에 따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적응실태,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의 어려움에 대한 요인에 대해 문헌 고찰 및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천적 개입의 부족함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 1.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탈해 온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 적응과 관련한 영역을 분석하였다. 그들의 적응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할 때에는 ‘직접설문’의 방식이 아닌, 기존 연구 중에서 비슷한 연구를 통하여 남한사회 적응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문헌자료를 중점적으로 인용하였는데, 연구방법은 주제와 관련된 정부의 공식문서와 간행물, 관련 단행서적, 보고서 및 기타 참고자료 등을 기초로 한 문헌분석에 의하며 선행논문과 통일 부 및 관련 연구기관에서 발간한 각종 통계자료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이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현황을 파악하고 어떠한 점이 남한에서의 적응활동을 가로막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 2. 북한이탈주민 현황

1994년 김일성 사후 1995년부터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최악의 식량난과 경제난을 겪게 된다. 이를 피해 탈북 하는 북한주민들이 증가하면서 중국 및 제3국을 경유하여 남한으로 입국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입국현황은<Table 1>, 1995년 41명이었던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1999년에는 312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2000년 이후 탈북현상은 브로커의 등장, 먼저 온 탈북 가족의 잔류가정에 대한 기획탈북 요청으로 인한 연쇄이동이 증가하면서 북한이탈주민 사회는 자체적인 성장 메커니즘을 가지면서 급성장의 궤도를 밟게 되었다.

입국인원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2002년부터는 해마다 그 수가 1,000명을 넘어섰고 2006년부터는 그 수가 2,000명을 넘어섰다.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012년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주춤하면서 그 기세가 꺾이게 되고 2012년 이후부터는 연간 입국자수가 1,500명대로 감소하였고, 2016년에는 1,418명이 입국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해마다 1,000명을 넘는 입국인원으로써 현재(2017년 6월) 3만5000명을 넘어섰다.

Table 1. Immigration to North Korea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male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662
female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sum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10	'11	'12	'13	'14	'15	'16	'17.03	sum	
male	591	795	404	369	305	251	299	46	8,848	
female	1,811	1,911	1,098	1,145	1,092	1,024	1,119	232	21,642	
sum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1,418	278	30,490	

\* Unification Ministry home page(<http://www.unikorea.go.kr/>)

또한 1990년대까지만 하여도 남성의 비율이 88%로 여성에 비해 압도적인 숫자였으며 12%에 해당하는 여성은 1995년 이후 탈북한 여성들이었다. 그것은 북한 내에서 탈북은 여성이나, 아동, 노년층에게도 가능한 일반화의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며 여성은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중국내에서의 은폐된 생활이 더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Table 2. North Korean defectors' academic ability

division		male	female	sum
none	N	9	18	27
	%	1.8	2.4	2.1
Elementary school	N	50	66	116
	%	9.7	8.7	9.1
middle School	N	300	491	791
	%	58.5	64.6	62.1
Vocational school	N	70	114	184
	%	13.6	15	14.5
University or higher	N	84	71	155
	%	16.4	9.3	12.2
sum	N	513	760	1,273
	%	40.3	59.7	100

\* Researcher Reorganization about Y. S. Yoon & S. H. Lim (2016)

한편 북한에서의 학력은 고등학교 학력자 비율이 62.1%이며 전문대학 이상 학력자 비율이 26.7%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고학력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2]<Table 2>.

사회계층 측면에서는 1999년 이후의 입국자들은 그 이전 입국자들과 비교하여 학력, 직업, 계층 면에서 떨어지는 추세이다[Table 3]. 북한인권 정보센터가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 무직, 주부와 같이 직업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의 비율은 29%였고 직업 보유자들 중 노동자, 농장원의 비율은 높으나 사무직과 관리직, 예술인과 체육인, 교원이나 의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은 현저하게 낮았다.

북한이탈주민의 계층현황 분석에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 조사한 자료의 부재로 정확한 수치 분석은 어려우나, 노동자인 경우에는 남성이, 농장원인 경우에는 여성이, 부양인 경우에는 거의 모두가 여성이, 교원인 경우에는 여성이, 의사인 경우에도 여성이 관리직인 경우에는 남성이, 봉사원인 경우에는 여성이, 외화벌이인 경우에는 여성이 수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Table 3. Occupation of defectors

division	number	ratio	division	number	ratio
worker	456	34.6	Etc	46	3.5
student	241	18.3	Arts and Physical Education	31	2.4
Office work	105	8.0	executive	31	2.4
Farmer	96	7.3	Servitor	24	1.8
floating	79	6.0	Foreign currency earner	17	1.3
soldier	73	5.5	Special agency	5	0.4
inoccupation	62	4.7	Fishing	3	0.2
Profession (teacher, doctor)	50	3.8	Sum	1,319	100

\* Researcher Reorganization about Y. S. Yoon & S. H. Lim (2016)

### 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실태

북한이탈주민을 처음 만났을 때 대개가 ‘어머! 이렇게 같을 수가...’라는 얘기를 한다. 그러나 만남이 잦아지면 ‘이렇게 다를 수가...’라고 한다. 같은 모습이면서도 다르고, 가까운데서도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북한이탈주민과 남한국민의 현 주소이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지원정책을 살펴보면[3], 국가유공자 및 월남

귀순자 특별원호법(‘62.4~)은 귀순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원호대상자로 우대하며, 최초로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하였다.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79.1~)에서는 정부는 귀순자를 사선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귀순용사’로 간주하며, 이전보다 더욱 체계화된 지원을 실시하였다. 귀순북한동포보호법(‘93.6~)은 귀순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생활능력이 결여된 생활보호대상자로 전환하며, 정착금 하향조정 등 지원규모를 대폭 축소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97.1~)을 내놓았다 또한 1997~1999년에 기존의 「귀순」의 개념을 「북한이탈」로 대체하고 자립·자활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었으며[4], 1999~2004년에는 교육지원의 수혜 연령범위를 확대하였고,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정착지원을 강화하여 2004~2006년에는 정착금의 인센티브제, 임대주택 제공 확대를 도입하였다. 한편 정착도우미제도 도입을 실행하였으며 2006~2008년에는 이혼특례의 조항을 신설하였고, 자격인증제도를 개선하고, 취업보호기간을 확대하였다[5].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해외 장기체류자의 보호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하나센터를 포함한 지역적응교육 및 청소년·학교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6]. 한편 2010년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를 설립하였으며, 성인의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2013~2014년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행복저축통장제를 실시하였으며[7], 취업 및 교육 등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가 위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들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은 여전히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국내입국시, 기초생활수급 및 영구임대아파트나 공공임대아파트의 진입으로 사회계층에서 하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8]. 하층으로 진입한 북한이탈주민은 사회계층의 상승이동이 이어지지 않는 한 각종 범죄와 사기에 노출되어 있으며 가뜩이나 어려운 그들의 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의 어려움은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다<Table 4>. 북한이탈주민들은 본인의 학력, 직업기술 및 경험의 부족 등과 같은 태생적 한계로 하여 구직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남한주민들의 편견과 차별로 인해 그 어려움이 더해지기도 한다. 남성의 경우에는 구직과정의 가장 큰 어려

움은 학력, 기능, 자격이 맞지 않는 것, 편견과 차별 때문에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편견과 차별 때문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건강상의 문제로 더욱 큰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Table 4. All economic activities of defectors(2009)

Division	total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worker	unemployed	Inactive population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rate	Unemployment rate	Employment rate
number	599	291	251	40	308	48.6	13.7	41.9
ratio	100	48.6	41.9	6.7				

\* Unification Ministry home page(<http://www.unikorea.go.kr/>)

## 4.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어려움

### 4.1 남북의 정치체제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

‘인민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이다. ‘인민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동반한다[9]. 북한주민에게 제3의 길이란 없다. 정형화된 정치체제를 지지하든지 반대하고 숙청되든지 양자택일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동지와 적을 구분 짓는 ‘아적(我敵)’관계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날 수가 없으며 동지는 혁명을 함께 해나가야 할 동반자이며 적은 반드시 숙청해야 할 혁명의 대상이다.

북한은 지난 반세기 이상 다원주의를 경험해 본적이 없다. 획일화, 일원화의 특징을 나타내는 용어가 많은 것만 봐도 다양성과 다원성과의 괴리를 알 수 있다[10]. 유일사상, 유일지도, 유일영도, 유일체제, 일색화, 일원화, 일편단심, 일심단결 등의 구호는 생활 속에서 행위규범으로 강요되었고 그 ‘하나’에 들어오지 못한 대상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대상이다. 북한사회는 또한 정의와 부정의, 정답과 오답을 뚜렷이 구분해주고 모든 북한주민이 이 기준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선거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와 같은 정치적인 자유는 물론이고 사유재산의 자유, 거주지 자유, 이동의 자유, 선택의 자유, 말과 행동의 자유, 등 경제적인 자유와 시공간적인 물리적 자유까지도 북한주민들이 잃어버리고 사는 자유이다. 감시와 통제, 총화와 비판을 수반한 긴

장된 조직생활과 강제성을 띤 사회동원, 노력동원, 각종 사회지원, 노력지원이 몸에 배어 왔다. 사회동원이나 노력동원에 대한 참가여부는 개인이 정할 수가 없다. 사회지원과 노력지원 역시 자율성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또한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온 감시제는 사람들을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공식규범과 비공식규범 사이에서 이중적인 가치관을 형성하였다.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는 북한당국이 요구하는 공식적인 행동을 하고 사석에서는 개인의 이익에 부합되는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가지고 있다.

#### 4.2 남북의 다른 경제제도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

능동적인 시장경제와는 다른 수동적인 계획경제사회에서 책임성과 적극성이 결여된 생활방식으로 인해 오는 어려움이다. 모든 것이 네 것과 내 것으로 분명히 구분되어 있고 필요한 재화와 용역은 자신이 알아서 마련하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유상의 원리가 작용하는 시장경제사회와는 달리 사회재산이 공동의 것으로 묶여있고 무상의 원리가 작용하는 것이 계획경제이다[11].

공급소나 배급소 앞에 늘어선 긴 줄과 물건확보에 혈안이 되어있는 모습들은 흔히 계획경제와 공급제에 길들여진 사람들의 모습이다. 절대재화의 부족으로 사람들은 물건이 있을 때 확보하고 봐야 하는 상황에 시달리게 된다. 또한 노동 강도의 차이는 북한이탈주민을 더욱 힘들게 한다. 계획경제하에서 사람들은 책임성이 부족하다. 출근도장만 찍으면 월급과 배급표가 나오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는 노동력을 상품화한 ‘부정적인 사회’로 묘사된다. 북한에서 노동력은 상품이 아니다. 북한주민들은 자기 노동력의 가치를 높여 더 많은 임금을 받으려는 자본주의 사회 사람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12].

공급제가 유지되던 시기의 북한은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한마디로 국가가 모든 것을 선택하여 준다. 살아야 할 지역과 주거 공간, 일해야 할 직장과 공급받아야 할 물품, 공급해주는 상점과 배급소, 다녀야 할 학교와 치료받아야 할 병원까지 선택받는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적응에서 겪는 어려움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선택이다.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 그 결과를 책임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경쟁 없는 공급제 사회에서 선택과 책임의 학습결여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어렵게 할 수 밖에 없는 요소이다.

#### 4.3 남북의 서로 상충되는 문화에서 오는 어려움

북한은 지난 반세기동안 주민들에게 과거와의 단절, 외부와의 단절, 종교와의 단절을 강요하였다[13]. 단절된 사회에서 살아온 후유증은 심각하다. 이는 다른 국가, 다른 사회 사람들과 심한 문화적 이질감을 느끼게 하며 폐쇄적인 사회적 분위기에 만연되어 닫힌 생각으로 이어진다. 북한에서 외부와의 단절은 더욱 심각하다. 평양과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거의 대다수의 북한주민들이 외국인을 본 일이 전무하다. 또한 외국서적이거나, 외국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1960년대 북한은 당시 많이 들어와 있던 러시아서적과 미술품에 대한 인민작업을 시작하였다[14]. 학교들에 걸려있던 러시아 명화나 작품을 내리고 북한 것으로 대체하였으며 교과서에 실려 있던 많은 러시아 작품들도 마찬가지였다. 미국과 서방, 일본이나 한국의 문화에 대한 차단수위는 더욱 높았었다.

한편 북한사회는 전투적인 분위기에 만연되어 있으며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공격적이고 비타협적으로 살도록 하고 있다[15]. ‘전투’, ‘행군’, ‘운동’, ‘투쟁’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용어가 많다. 타협은 ‘공산주의도덕’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의 비굴한 행동으로 정형화 된다. 북한에서 말하는 타협은 곧 신념이 없는 표현이요, 변절이라고 간주된다. 북한주민에 있어 공식적인 장소에서의 타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산주의도덕’에 길들여진 북한주민은 타협에 서툴다. 북한은 집단의 이익에 개인이 희생되는 것을 당연시 하는 사회적 분위기로부터 오는 개인주의는 곧 이기주의와 같이 나쁜 사상임을 강조한다. 북한에서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이 이익이 희생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북한의 낙후한 인프라는 정보화시대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온라인 경험이 거의 없다[16]. 온라인문화의 부재는 타국과의 문화적 단절을 초래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은 북한에서 태어나 학습하여 온 태생적 한계로 하여 그들의 사회적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전언한 것처럼 정치사회체제, 경제제도, 문화제도에서 남북한의 차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스스로의 노력과 남한주민들의 포용력 있는 이해를 동반할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 4.4 가족관계로부터 오는 어려움

어느 사회에서나 여성에게는 남성에 비해 가족관계나 양육에 대한 책임이 강하게 부여받게 된다. 가족 구성의 측면에서 볼 때 탈북여성들은 이별, 이혼, 별거 등의 이유로 결혼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17]. 또한 결혼 상태와 관련하여서는 결혼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비율이 30-40대에서 20%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이별, 이혼, 별거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와 불안정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이탈주민의 가족해체와 불안정한 결혼생활은 상당수의 결혼이 한국에 입국한 후에 일어난 현상이라는 점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18].

북한이탈주민 중 북한과 중국 등지에 가족의 일부를 두고 온 이산가족의 경우에는 가족의 신변 불안 때문에 정서적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윤인진(2012)의 연구에 따르면 직계가족이 북한에 남아있을 경우, 이들의 재산봉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가족의 이산은 남한사회 적응의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하였다[19].

북한이탈주민 가족은 남한사회에서 적응하면서 부부관계, 성역할 의식, 부모-자녀관계 등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남성 중심적인 부부관계는 남한생활에서도 일정부분 유지되고 있지만, 자녀 양육 및 교육, 의논 상대, 경제적 기여 등에서 여성의 역할이 북한생활과 비교해서 커지게 된다[20]. 윤여상과 임순희(2016)는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남한사회 적응에서 ‘제팔 제혼들기’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다. 이는 자녀의 양육 및 교육의 책임이 가중된 탈북여성에게 사회적응의 어려움도 동시에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21].

부모-자녀관계에서는 양육 및 교육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남북한에서의 어려움의 형태가 다르게 표출되어 북한에서는 당시 북한의 식량난을 반영하듯이 “자녀의 식사와 건강을 돌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많이 지적하게 된다면, 남한에서는 사교육비 부담과 자녀의 학교공부 및 진로지도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22].

## 5. 논의

북한이탈주민들 중에서도 통합형이나 동화형의 주민들은 남한문화에 대한 수용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사회 구성원들과의 접촉

을 갈구하고 그들과의 문제 발생 시에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도 주동적으로 세우고자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의든 타의든 간에 결과적으로 분리형이나 주변화형의 주민들은 일반 사회 구성원들과의 접촉을 회피하고자 하며 그들과의 문제 발생 시에는 수동적인 입장에 설 수 밖에 없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주민들과의 접촉보다는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끼리의 일자리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그들을 반드시 여기에 귀속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시간이 흘러 그들이 일반사회로의 진입을 원하게 되는 경우, 언제라도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유연성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사회안전망 [社會安全網, social safety net] 대책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안전망은 정부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과 실업에 대한 각종 대책을 일컫는 말인데, 개인이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된 뒤 다시 직장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대신 노숙자 같은 사회적 무기력 층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안전망 제도가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용한다면, 일반회사나 직장에서 좌절한 북한이탈주민 성인들에게 국책사업 일환의 공단을 형성하여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면 언제라도 후퇴할 수 있고 언제라도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및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또 다른 역차별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정착지원체제와 지원내용은 제도적 틀을 갖추고 지속적인 보완과 수정을 진행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의지를 제고하고자 진화하고 있다. 민간단체 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에 대한 참여의지가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사회경제적 적응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취업 장려금 정책은 3년간 진행되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이 한 일자리에서 3년간 지속적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해마다 일정책의 장려금을 지급하여 모두 18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 일자리에서 버터내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부적응의 문제를 사회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다 북한이탈주민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다 모두가 적절치 않다. 북한이탈주민이 성의껏 노력하고 남

한사회의 제반 시설들이 이를 받침해 줄 때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들은 이 사회의 짐이 아니라 사회적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회 구성원인 남한사회 사람들과의 조화로운 어울림과 정서적인 공유라고 생각한다. 북한이탈주민은 시공간을 뛰어넘어 남한사회에 진입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들이 이 사회의 성원으로 거듭나는데 적지 않은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 수용정도가 높아질 때까지,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적응능력이 높아질 때까지 과도기 기간을 정하여 안전망을 구축해준다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진입을 도모하고 작게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크게는 남한사회의 일원으로, 나아가서 통일한국의 자산으로 만드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 References

- [1] Ministry of Unification, North Korean defectors' policy, <http://www.unikorea.go.kr/>(Search date: May 20, 2017)
- [2] Y. S. Yoon, S. H. Lim, *2015 North Korean defectors' economic and social integration*. Seoul: North Korea Human Rights Information Center, 2016.
- [3] C. Y. Kim, "Settlement support policy of North Korean defectors", *Unification Strategy*, vol. 3, no. 2 pp. 63-95, 2003.
- [4] S. D. Kwon, "A Study on South Korean Social Integration Policy for North Korean Defectors", *Journal of the Institute of Korean Political Studies Center for Social Sciences*, vol. 23, no. 1 pp. 101-126, 2014.
- [5] J. B. Lim, "Regional Support System and Stakeholder Analysis for the Settlement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Journal of Korea Policies Institute*, vol. 12, no. 2 pp. 249-272, 2012.
- [6] Y. T. Kim, C. H. Bae, "Ways to Support Residents Fled from North Korea in Their Living & Adaptation to the Community",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vol. 25 pp. 81-115, 2010.
- [7] North Korea, students, school uniform, change, "Government Reinforces Economic, Financial and Living Law Educa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Unification Korea*, vol. 5, 2015.
- [8] C. K. Kang, "North Korean Refugee Supporting Policy Based on Barrier Factor Analysis",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vol. 22, no. 1 pp. 261-290, 2010.
- [9] J. J. Seo, "Comparative Study of Marxist-Leninism and Juche Ideology in North Korea", *Journal of Territorial and Maritime Studies*, pp. 1-176, 2002.
- [10] S. A. Kim, "North Korea's Recognition and Response to Democracy and Human Rights", *Journal of Territorial and Maritime Studies*, pp. 1-122, 2007.
- [11] H. S. Kim, S. S. Oh, "The stereotypes, affects and attitudes of college students and citizens toward North Koreans : A comparison with those toward other foreigners", *Psychological Science*, vol. 8, no. 1 pp. 1-22, 1999.
- [12] G. Y. Nam, "Labor Policy and Labor Force Assessment in North Korea", *Journal of Territorial and Maritime Studies*, pp. 1-79, 1996.
- [13] T. W. Yum, "A Phenomenological Approach to Traumatic Experiences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1, no. 2 pp. 189-213, 2009. DOI: <https://doi.org/10.20970/kasw.2009.61.2.008>
- [14] H. S. Kim, S. S. Oh, *Idid.*, 1999.
- [15] J. W. Park, "A Study on the Normative Control for the Security of Kim Jong-il's Regime: with Emphasis on the Addenda of the North Korean Criminal Law in 2007",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vol. 22, no. 1 pp. 225-259, 2010.
- [16] S. C. Whang, S. H. Hong, "A Study of Effects of On-line and Off-line Media on Political Socializ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vol. 29, no. 4 pp. 5-32, 2012.
- [17] Y. S. Jeon, "Analysis of the Settlement Status of North Korean Defectors", *Journal of Korea Women's Research Institute*, vol. 11, no. 8 pp. 5-32, 2012.
- [18] T. W. Yum, "A Qualitative Study on the Positive Strength of Dealing with the Psycho-Social Crisis of North Korean Defectors", *Mental Health & Social Work*, vol. 32 pp. 215-247, 2009.
- [19] I. J. Yoon, "Acculturation and Social Adaptation of North Korean Migrants",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41 pp. 37-61, 2012. DOI: <https://doi.org/10.17790/kors.2012..41.37>
- [20] I. J. Yoon, *Op. cit.*, 2012.
- [21] Y. S. Yoon, S. H. Lim, *Idid.*, 2016..
- [22] H. Y. Jo, J. H. Bae,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n refugee families' psychological environment of parenting and young children's prosocial behavior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9, no. 2 pp. 91-114, 2014.

채 경 희(Kyung-Hee Chae)

[정회원]



- 2008년 2월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석사
- 2010년 8월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박사수료

<관심분야>  
북한사회, 북한교육